건강타운 유료화 추진 이용노인 부담 커질 듯

市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건강타운)이 식당 및 목욕탕 이용료를 50% 인상하고 그동안 무료였던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이용 노인들의 금전적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시는 1일 "최근 북부노인복지타운의 명칭 변경 및 프로그램 유료화 및 사용료 현실화 등을 담은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북부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목욕탕 이용료는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리고 애초 무료였던 탁구장·당구장 등도 시간당 5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헬스장 월 이용료는 5000원, 수영장은 3만원으로 각각 인상을 추진중이며, 프로그램 과목당 월 수강료 5000원과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3000원도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50%, 기초생활수급권자 10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타운 내 시설 운영을 위해 이용요금은 현실화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줘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문을 연 건강타운은 다양한 건강·문화시설, 1000원에 불과한 식대 및 목욕탕 사용료, 무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용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사용료 등으로 자체 재원이 거의 없는데다 애초 매년 20억원씩 보태기로 한 빛고을골프장 역시 수익저조로 인해 지원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경영난에 봉착했다.

특히 광주시가 올해 빛고을 노인 건강타운 운영비로 37억원을 편성, 운영비 10억원 이상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측이 사용료 인상 및 프로그램 참가비 현실화에 나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광주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시공사 현대건설 확정

조합원 91% 찬성 건립 본궤도… 지역업체 참여 불가능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 선수촌이 될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재건축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대건설이 단독 시공업체로 결정되면서 추후 시공업체 변경 등의 절차가 없는 한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일"지난 30일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돼 지난해 구도심 재생을 목표로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추진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조합원 2651명 중 91.5%인 2427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변경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승인, 시공자 선정 등의 안건을 논의해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모두 통과됐다.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건설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조합원들이 국내 1위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을 선호한데다 제안서 제출 뒤 조합원 임시총회까지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시행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조합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임시총회에서 가결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분양신청을 한 세대에 대해 기본이주비 3000만원, 이사비 100만원 등을 지급, 이주 및 철거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 및 분양에 나서고 2015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주·철거과정에서 민원 및 마찰을 없애 공사기한을 준수하고 미분양 물량을 줄여 공공재정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과제로 남게 됐다. 또 35층의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및 경관, 주변과 부조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정주공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9만4491㎡로 용적률 269.07%가 적용돼 기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35층 규모의 35개동, 3727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노무현재단과 봉하재단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2주기… 봉하마을서 고유제

한달간 전국서 추모문화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1일부터 5월 한 달 간 전국에서 추모 문화제와 전시회, 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무현 재단과 봉하재단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고유제(告由祭)를 갖고 한 달간의 추모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유제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 세상은 그분이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과는 반대로 가고 평화도 멀어지고 있다"며 "마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다.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고유제에 이어 추모의 집 야외광장에서 '2주기 추모 봉하 야외전시'란 제목의 추모 전시회 개막식을 했다.

노 전 대통령 2주기 추모행사는 ▲11일 학술 심포지엄 '노무현의 꿈, 그리고 그 현재적 의미'(국회 헌정기념관) ▲12일~23일 전시회 '바보 노무현을 만나다'(인사동 서울미술관) ▲21일 추모공연 'Power To The People 2011'(서울광장),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봉하) ▲22일 추모문화제 '사람사는 세상이 돌아와'(봉하) ▲23일 2주기 추도식(봉하 대통령묘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에서는 오는 19일 광주 동구 운림동 문빈정사에서 무등산 '노무현 등산로' 명명식이 열리고, 21일에는 문빈정사에서 광주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06년 유엔사무총장 반기문 당선이 유리"

주한 미대사관 분석

지난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은 그의 당선이 미국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지난 30일 공개한 2006년 7월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은 반 장관이 미국 사람들과 가치, 정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자연히 그가 미국 전반에 대해 호의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라크 파병부터 주한 미군기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생기면 반기문에게 간다며 그는 언제나 호의적이고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가 유엔사무총장이 되더라도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대통령 3명에 대한 당시 미 대사관의 평가도 공개됐다. 전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혈질(hot-tempered)에 보수적이며 대다수의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인물로 외교정책의 모든 방면에 능숙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졸 출신으로 국제무대에서는 신참이지만 강한 견해와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각각 평가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전국 첫 가축전용 방목장 만든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정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가축 전용 '운동장(방목장)' 조성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 녹색축산 실천을 위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축사에 방목장을 만들어 소와 돼지, 닭, 오리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정한 사육 밀도를 유지하게 하고 그늘막과 경관림 식재 등 친환경 축산 정책을 장려했다. 예를 들면 송아지(한우)의 경우 축사 외에 마리당 2.5㎡, 돼지(임신돈)는 마리당 1.4㎡, 산란계(토종닭)는 1.1㎡이상의 방목장을 갖출 것을 권장했다.

또 방목장을 설치하면서 가축분뇨 유출을 막는 방지턱 등을 마련토록 했고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도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에 대한 이전을 권고하고 이 경우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축산분야 정책사업 지원 등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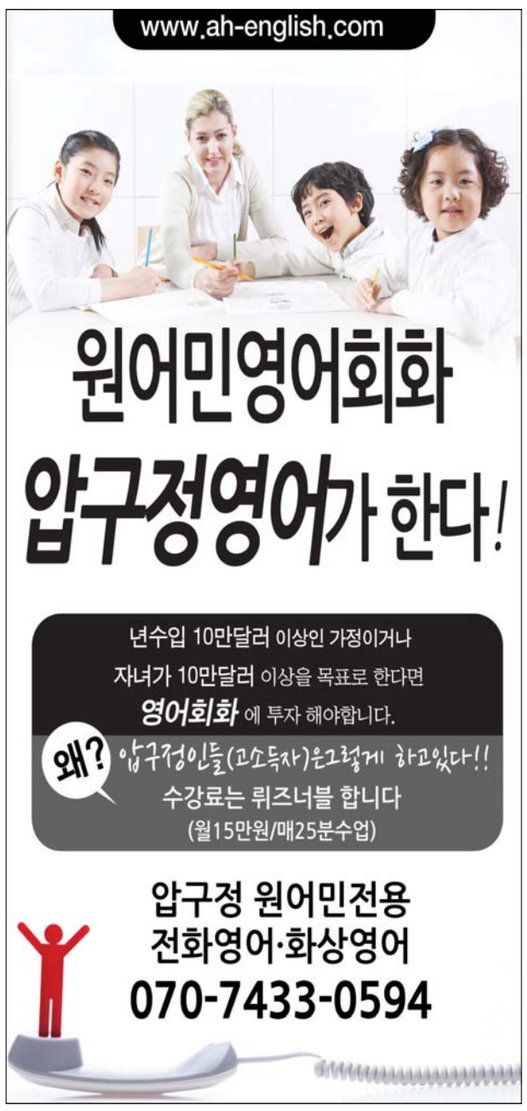
가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육환경을 동물복지에 맞춰 개선하는 등 친환경 녹색 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혁신도시에 자율고 등 우선설립 가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공립형 국제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국회혁신도시건설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나주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가 교육타운 기능을 갖춘 '자족형 교육거점 도시로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와 공립형 국제고,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 시·도와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혁신도시에 동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